

2023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①

김중규



기출은 미래다!
10년간 기출을 완벽 정제

최근 기출 문제와
개정 법령 완벽 반영

이론과 문제의 체계적 연결
및 100% 전 지문 해설

이공이삼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9·7급 통합)을 펴내며

기출은 미래다, 행정학 기출혁명

행정학에서 기출문제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기출문제가 고득점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대한 행정학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하여 비로소 완성되고 앞으로의 출제경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학 커리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2023 기출문제 선행정학은 합격생과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아래와 같이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023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의 특징이자 강점은

첫째, 9·7급 등 모든 공무원 행정학을 위한 통합 기출집입니다.

여러 시험을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9급, 7급, 국회, 경찰, 군무원, 공사·공단 등 다양한 행정학 시험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각종 기출문제의 경계를 뛰어넘어 정제·분석·수록하여 기본서 체제에 맞추어 통합하였으며 휴대하기 편하도록 3권으로 분권 출간하였습니다.

둘째, 가독성을 한 층 높였습니다.

종래 2도였던 것을 4도(컬러)로 전환하여 가독성을 한층 높이고, 해설 부분 키워드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핵심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셋째, 2,000여 문제를 엄선·정제 하였습니다.

최근 10여년간의 2,000여 문제를 엄선·정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의성이 없어졌거나, 중복되거나, 재출제가능성이 없는 문제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재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만 엄격히 정제하여 최종 2,000여 문제(유제 100, 7급용 100 포함시)를 선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문제의 연결이나 흐름상 공백이 생긴 것은 전혀 아니며, 단 한 문제도 빠져 나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그물을 쳤습니다. 따라서 양적으로는 분량이 약간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퀄리티가 오히려 높아진 것입니다.

넷째, 이론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론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 이론과 정리표 등을 배치함으로써 이론단계에서 이해 못한 부분들을 기출단계에서라도 이해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다섯째, 최근 기출문제와 개정법령을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에 대하여 출제 당시와 달라진 제도 개편, 최근 법령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법」, 「지방자치법」 등)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의 적절히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경우에는 재시생들을 위하여 종전 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비교·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 뿐 아니라 최근 공기업이나 군무원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도 중요한 문제는 일부 수록하고 최근에 치러진 2022 국가9급, 지방9급 문제까지도 모두 분석·수록하였습니다.

여섯째, 100% 전 지문 해설을 달았습니다.

해설과 정리를 최대한 간결하고 명쾌하게 수록하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틀린 지문은 물론, 옳은 지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설을 제시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해당 지문이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특히 대충 정답에만 꿰맞춘 듯한 성의 없는 해설로 일관된 시중의 다른 교재들과 달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명쾌한 해설을 제시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일곱째, 논란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있는 문제들을 배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승부하였으며, 잘못된 해설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을 배려하여 카스파(김중규행정학아카데미)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글들을 바탕으로 다른 교재의 잘못된 부분들까지도 바로잡아주는 개방적이고도 과감한 해설을 시도하였습니다. 행정학의 필수과목화에 대비한 고득점전략을 위해서 해설의 폭과 깊이를 한층 보강한 것입니다.

여덟째, 정답을 찾아가는 경로와 암기법을 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중요하거나 자주 틀리거나 빈번하게 질문을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답 제시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과 경로를 알려주어 실수하지 않고 패턴별로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어갈 수 있도록 “중규쌤 팁”란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수업때 강조했던 암기법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는 암기법  까지도 표기해두었습니다.

아홉째, 합격생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행정학 교재로 공부해온 합격생들이 아쉬워 했던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여 개선하였고, 합격생들이 문제를 풀어갔던 과정이나 아이디어를 수험생 눈높이에 맞추어 합격생 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열번째, 빈출되는 유사·중복 문제는 유제로 처리하였습니다.

유사·중복되는 문제라도 논점이 약간 다르거나 빈출되는 중요한 문제는 버리지 않고, 관련 문제 아래에 유제 형식으로 처리하여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게 문제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기본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첨삭 형식으로 보충설명을 곁들여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기출집이 기본서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고득점의 여부를 결정짓는 헛갈리거나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문제 하단에 눈에 잘 띄게 주의형식으로 처리하여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요약·정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문제마다 난이도와 중요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경중을 가려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난이도와 중요도는 다릅니다. 중요도는 앞으로 재출제가능성 등을 감안한 문제의 중요도로 꼭 알아두어야 할 정도이고, 난이도는 해당 문제를 푸는데 요구되는 실력이나 기술, 틀리는 빈도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험생 여러분들로 하여금 흔히 시험에 임박할수록 중요한 문제보다 자주 틀리는 문제(난이도 높은 문제)에 치중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난이도보다 중요도가 훨씬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시험에 임박할수록 자주 틀리는 문제(중요하지 않은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 위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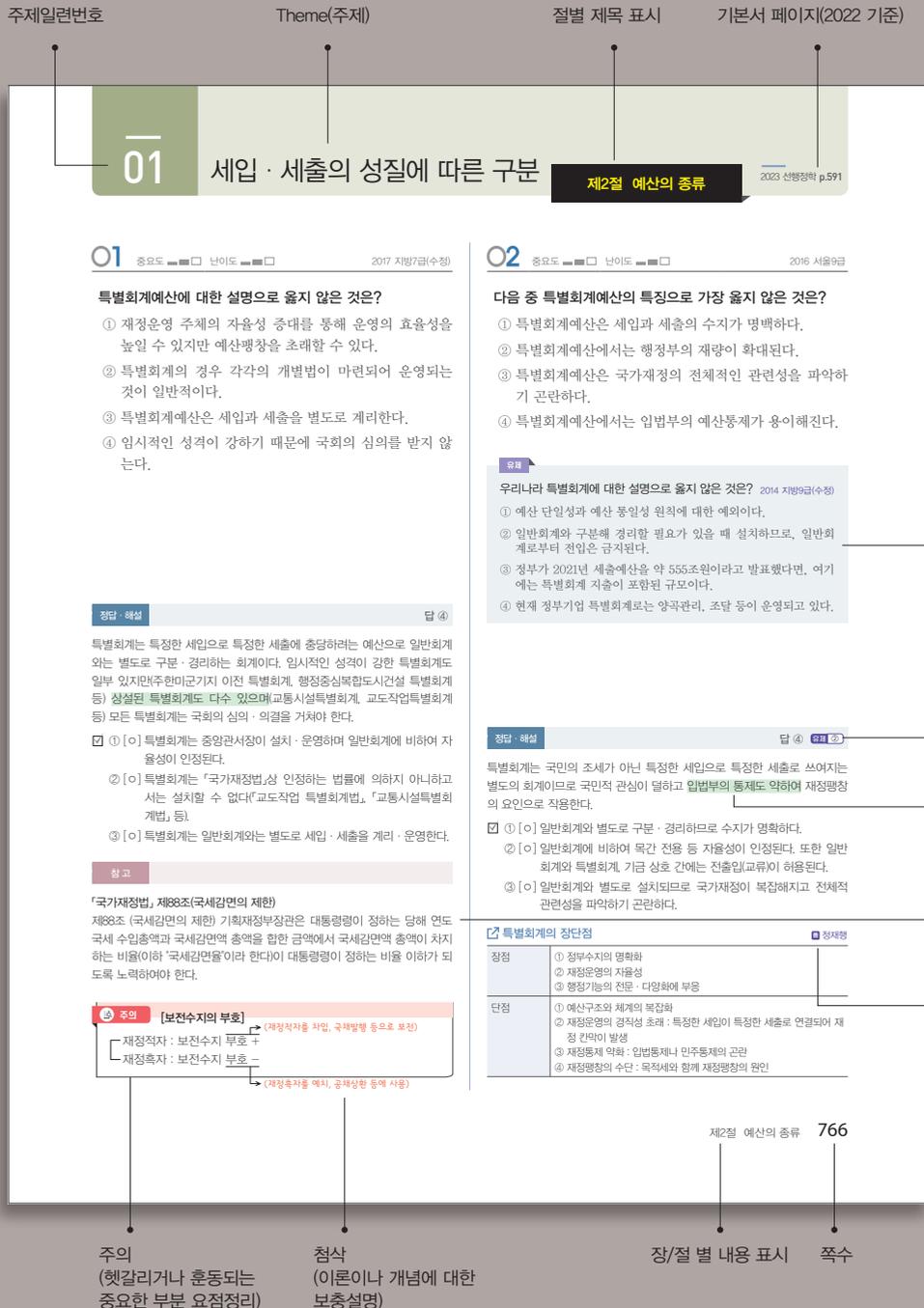
이번 2023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은 합격생들과 수험생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분량과 편철, 편집형식, 수록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의견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2023 기출집 원고 교정에 힘써준 제자·조교들(김준범, 조선영, 김희진, 이혜인, 김소연, 차은주, 최시하)

교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저절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정성에 정성을 다한 이공이삼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으로 행정학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6.30. 카스파 연구실에서

지은이 김중규

이 책의 페이지 구성과 특징



• 유제 (본문제와 논점이 유사하지만 지문이 약간씩 다른 쌍둥이 문제)

• 유제정답

• 하이라이트 (해설 중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강조하여 해설 내용을 빠르게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

• 참고 및 연구 (문제와 관련된 법령 조문이나 학술)

• 암기법 (두문자를 활용한 암기법)

파트별 출제빈도 분석(최근10년)

F R E Q U E N C Y

장 (Chapter)	절 (Subject)	출제빈도					주요 출제 주제(Theme)	총 출제 횟수
		10	20	30	40	50		
Ch 01 행정학의 기초이론	01 행정의 본질	■					행정의 개념, 재화의 유형과 특성	531
	02 행정과 환경	■					정치와 행정, 행정과 경영, 사회적 자본	
	03 행정의 변천	■					행정의 변천, 현대행정의 특징, 후기산업사회의 특징	
	04 시장실패와 대응	■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응, 정부규제	
	05 정부실패와 대응	■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민영화	
	06 행정의 지향과 가치	■	■				행정이념의 변천, 공익, 형평, 정의, 능률성, 합리성, 가외성	
	07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행정학의 성립·발달	
	08 행정학의 주요이론	■	■	■	■	■	행태론, 체제론, 신행정론, 공공선택론, 신제도론,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	
Ch 02 정책론	01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					정책수단, 정책의 유형	439
	02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	■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문제의 구조화, 정책의제 설정모형,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모형, 정책네트워크 모형	
	03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	■				체제분석, 직관적 예측, 델파이기법	
	04 정책결정	■	■				개인차원의 의사결정모형,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	
	05 정책집행	■	■				정책집행이론	
	06 기획	■					기획	
	07 정책평가와 환류	■	■				정책평가의 유형과 방법, 정부업무평가, 정책평가의 요소, 실험	
Ch 03 조직론	01 조직의 본질과 기초이론	■					조직의 유형	450
	02 조직행동론	■	■				인간관과 동기이론, 갈등, 리더십	
	03 조직구조론	■	■	■			조직의 구조변수, 관료제, 애드호크라시, 책임운영기관	
	04 조직환경론	■					거시조직이론, 혼돈이론	
	05 조직관리론	■	■				정보공개, 목표관리(MBO), 조직발전(OD), 총체적 품질관리(TQM), 균형성과관리(BSC)	

이 책의 내용과 순서

C O N T E N T S

제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본질

01 행정의 개념	19
02 행정의 특성	22
03 공공재로서의 행정	23
04 행정기능 & 행정과정	30

제2절 행정과 환경

01 행정의 정치	31
02 행정과 경영	35
03 행정과 법	38
04 시민사회와 제3섹터 · NGO	39
05 사회적 자본	42

제3절 행정의 변천

01 현대행정의 특징	47
02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51
03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	53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 시장실패

01 시장실패	55
02 정부규제	58
03 행정지도	70

제5절 행정의 한계 - 정부실패와 대응

01 정부실패	71
02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76
03 감축관리론 - 작은 정부론	77
04 공공부문의 민간화	79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01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계	88
02 행정의 본질적 가치	90
03 행정의 수단적 가치	98
종합 행정이념	106

제7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01 행정학의 성격과 접근법	112
02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115

제8절 행정학의 주요 이론

01 과학적 관리론	119
------------	-----

02 인간관계론	122
03 행태론적 접근	124
04 생태론적 접근	128
05 체제론적 접근	129
06 비교행정론	132
07 발전행정론	133
08 신행정론	134
09 현상학	138
10 비판행정학과 담론이론	140
11 공공선택이론	141
12 신제도론	153
13 신공공관리론	163
14 거버넌스론	172
15 신공공서비스론	184
16 탈신공공관리론	191
종합 행정이론	192

제2장 정책론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01 정책과학의 특성과 본질	213
02 정책의 본질과 유형	215
종합 정책유형	225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01 정책의제의 설정	231
02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모형	242
03 정책네트워크(정책망)모형	256
04 정책목표	264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01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	266
02 정책분석의 유형과 차원	267
03 체제분석	268
04 관리과학	275
05 직관적(판단적) 예측	276
06 불확실성과 미래예측	284

제4절 정책결정

01 정책결정의 본질과 과정	289
-----------------	-----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사이먼(H. Simon)은 ‘행정행태론’에서 정치적 요인과 가치문제를 중심으로 조직 내 개인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 ③ 애플비(P. Appleby)는 ‘거대한 민주주의’에서 현실의 행정과 정치 간 관계는 연속적, 순환적, 정합적이기에 실제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 ④ 굿노우(F. Goodnow)는 ‘정치와 행정’에서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정치이며, 이를 실행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규정하였다.
- ⑤ 왈도(D. Waldo)는 ‘행정국가론’에서 사기업 영역의 관리이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경우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 해설 답 ④

- ④ 정치행정이론자 굿노우(Goodnow)에 대한 설명만 옳게 되어있다.
- ① [X]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 ② [X] Simon은 「행정행태론」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중심**의 연구를 강조하였다.
- ③ [X] Appleby는 「정책과 행정」, 「정부는 다르다」, 「거대한 민주주의」 등에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 ⑤ [X] Waldo는 「행정국가론」에서 행정이 가치중립적이라는 행태론적 시각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능동적이고 **가치지향적 관점**으로 행정을 재정의하였다.

주요 학자별 저서와 내용

학자	저서(연대)	주요내용
W. Wilson	행정의 연구 (1887)	행정은 정치가 아닌 경영. 정치행정이원론. Pendleton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행정학의 창시자
Goodnow	정치와 행정 (1900)	정치(국가의사의 결정)와 행정(국가의사의 실현·집행)의 엄격한 구분. 정치행정이원론
M. Weber	관료제 (1901)	관료제의 창시자. 계층제 형태의 이념형 관료제가 이상적이라고 주장
F. Taylor	과학적관리법 (1911)	시간연구 & 동작연구, 성과급 등 과업관리, 과학적 관리론의 선구자
L.D. White	행정학입문 (1926)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 행정이란 사람과 물자의 관리임을 강조
Gulick & Urwick	행정과학논총 (1937)	최고관리층의 7대 기능(POSDCoRB). 행정관리설의 대표적 모형
M. Dimock	현대정치와 행정 (1937)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정합적 개념(정치행정이원론). 사회적 능력 중시
H.A. Simon	행정행태론 (1945)	행정은 합리적 의사결정, 가치와 사실의 분리, 논리실증주의 도입, 원리주의 비판. 정치행정세이원론
Gaus	행정에 대한 반성 (1947)	생태론 도입. 정치와 행정의 연계 중시
D. Waldo	행정국가론 (1948)	행정이 가치중립적이라는 행태론적 시각을 비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능동적·가치지향적 행정 강조
P. Appleby	정책과 행정 (1949)	「거대한 민주주의」에서 행정과 정치는 융합적·연속적 관계. 정치행정이원론. 「정부는 다르다」에서 공사행정이원론 제창

13

중요도 ■■■ □ 난이도 ■■■ □

2022 국회8급

티부(C. Tiebout)모형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정부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②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③ 고용기회와 관련된 제약조건은 거주지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 ④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의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소수의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답 ⑤ 유제 ①

티부가설은 지방정부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이론으로 선택가능한 다수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 ① [○] 지방정부의 재원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한다.
- ② [○]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즉, 당해 자치단체의 서비스 혜택은 당해 자치단체 지역주민들만 누려야 한다고 전제한다.
- ③ [○] 고용기회와 관련된 제약조건은 거주지역 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한다.
- ④ [○]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거주지역을 자유롭게 선택 또는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 티부가설(발로 하는 투표)의 기본가정

- ① 다수의 지역사회(소규모 지방정부) 존재
- ② 완전한 정보
- ③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 - 완전한 이동
- ④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 - 규모의 경제 작용 X, 규모수의 불변
- ⑤ 외부효과와 부존재 →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재산세가 유일한 재원
- ⑥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 재산세
- ⑦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
- ⑧ 최적규모의 추구 - 규모가 크면 주민 유출, 작으면 주민 유입

14

중요도 ■■■ □ 난이도 ■■■ □

2010 국회8급

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에서 상징하는 지방자치 논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측면을 강조한다.
- ②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 ③ 주민들은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다든 전제 하에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한다.
- ④ 지방정부는 최적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 ⑤ 정보통신 발달 및 생활광역화가 '발로 하는 투표'의 설득력을 높인다.

유제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지방9급

- ① 시민의 이동성
- ② 외부효과와 배제
-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 ④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정답 · 해설 답 ⑤ 유제 ③

정보통신발달 및 생활광역화는 주민들의 이동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발로 하는 투표의 설득력을 낮춘다. 티부가설은 소규모 자치구역을 전제로 하는 모형이다.

- ① [○] 티부가설 등 공공선택론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주민선호에 부응하는 대응성을 강조한다.
- ② [○] 완전경쟁시장처럼 선택가능한 다수의 소규모 자치정부가 존재해야 한다.
- ③ [○] 티부가설은 자유로운 이동,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한다.
- ④ [○] 모든 지방정부는 인구가 너무 많으면 인구유입을 막고, 너무 적으면 인구유입을 유도하려 노력한다고 본다.

03 중요도 ■■■ □ 난이도 ■■■ □

2004 국가9급

거버넌스의 정책 이념적 측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버넌스에서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의 도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③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부혁신을 모색하는 입장에서는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책 효율성을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④ 정책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이론에서는 정부-시민간에 협력을 통한 민주성 증진을 중요시한다.



시장논리를 중시하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거버넌스를 구분하세요.

정답 · 해설

답 ③

뉴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정책네트워크(정책연계망)를 통한 정부혁신은 효율성이라는 결과보다는 참여를 통한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효율성을 희생시키거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 ① [○]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는 초기 거버넌스로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신공공관리를 의미한다.
- ② [○] NPM은 경쟁을 통한 효율과 성과의 제고를 중시한다.
- ④ [○]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거버넌스는 후기의 뉴거버넌스로 민관협치를 통한 민주성과 대응성을 중시한다.

주의 [NPM & GO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M — GOV 	효율성 ○	민주성 ×	책임성 △
	효율성 ○	민주성 ○	책임성 ○

→ 성과에 대한
→ 국민에 대한

04 중요도 ■■■ 난이도 ■■■ □

2016 서울9급(수정) 등 총2회

전통적 정부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피터스(Peters, 1996)가 제시한 네 가지 모형에서 각 모형이 제시한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조의 개혁방안	관리의 개혁방안
① 시장적 정부모형	분권화	민간부문의 기법 도입
② 참여적 정부모형	평면조직	총품질관리 및 팀제 도입
③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계층제	관리 재량권 확대
④ 신축적 정부모형	가상조직	가변적 인사관리

정답 · 해설

답 ③

탈내부규제모형은 내부규제에 문제의식을 두고 내부규제를 줄이자는 모형으로 **조직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방이 없다.** 계층제는 전통적 정부모형의 구조에 해당한다.

- ① [○] 독점성을 문제삼으며 분권화(시장화)된 조직을 제시
- ② [○] 계층제를 문제삼으며 계층제적 성격을 띠지 않는 수평적 조직(팀제)과 수평적 관리(TQM) 중시
- ④ [○] 항구성을 문제삼으며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조직(가상조직)과 관리(임시고용) 중시

07 중요도 ■■■ □ 난이도 ■■■ □

2013 국회8급

다음 중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별 문제의 진단 기준과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 ②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저통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내부규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관리 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 ③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 개혁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 ④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 ⑤ 신축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영속성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유제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시장 모형의 구조 개혁 방안으로 옳은 것은? 2022 국회8급

- ① 계층제 ② 분권화
- ③ 평면조직 ④ 가상조직
- ⑤ 기업가적 정부

정답·해설

답 ④ 유제 ②

→ 계층제가 문제라는 입장

- 참여정부모형은 가상구조가 아니라 탈계층제조직인 평면구조를 제안한다.
- ① [○] 전통적 정부모형은 전형적인 관료제 모형으로 전근대적 권위를 문제삼으며 합법적 권위에 의한 계층제 조직을 강조
 - ② [○] 공무원의 창의력과 재능을 억압하는 내부규제를 문제시
 - ③ [○] 독점성을 문제삼으며 분권화(시장화)된 조직을 제시
 - ⑤ [○] 항구성을 문제삼으며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조직(가상조직)과 관리(임시고용) 중시

7급용

08 중요도 ■■■ □ 난이도 ■■■ □

2009 서울9급

정부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참여적 정부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보다 절차를 더 중시
- ② 정부관료제가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희생적이고도 재능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
- ③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준자치적인 조직들이 상부로부터의 정책이나 이념적 지시에 순응할 것을 기대
- ④ 공조적이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간에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
- ⑤ 특정한 정책영역에 항구적인 관할권을 지닌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에 의존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신축성을 증대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게 됨을 강조

정답·해설

답 ④

- Peters의 거버넌스모형 중 '참여적 정부모형'이란 공공조직이 계층제를 탈피하고 보다 수평적인 평면구조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간에 계층의 수를 축소시켜나가는 모형을이다.
- ① [×] 전통적 정부모형
 - ② [×] 공무원의 창의력을 분출시키려는 탈내부규제적 모형
 - ③ [×] 시장적 정부모형
 - ⑤ [×] 조직의 항구성(영속성)을 문제삼는 신축적 정부모형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이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relevance)과 실천(action)을 강조하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 ③ 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 ④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경로의존성과 관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답·해설 답 ③

반대이다. 공공선택이론 중 티부(Tiebout) 가설이나 오츠(Oates)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단일의 대규모 정부(중앙정부)보다 권한이 분산된 소규모 자치정부에 의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 ☑ ① [○] 생태론은 행정의 독자적 주체성을 간과하고 행정체제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생태론적 결정론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 ② [○] 신행정론의 토대이 되었던 후기행태주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에 의존하는 관성과 지속성을 띠며 나머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제도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행정생태론 -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 - 환경요인 중시
- ②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Easton) -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
- ③ 신공공관리론 - 리그스(Riggs) -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
- ④ 뉴거버넌스론 - 로즈(Rhodes) -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정답·해설 답 ④

④만 옳게 연결되어 있다.

- ☑ ① [×] Osborne과 Gaebler는 생태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을 주장한 학자이다. 생태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Riggs이다.
- ② [×] 후기행태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하며 **가치지향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를 강조한 것은 Simon의 행태론이다.
- ③ [×] Riggs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생태론**을 주장한 학자이다.

☑ 행정이론의 변천

시기	이론	학자	특징
1880	과학적 관리론	Taylor	행정학 성립기 때의 고전적 행정이론
1930	인간관계론	Mayo	신고전적 행정이론
1945	행정행태론	Simon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과학적 연구
1950	생태·체제론	Riggs	행정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개방적 거시이론
1960	발전행정론	Esman	개도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이론
1960	신행정론	Waldo	격동기 미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이론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를 비판한 D. Easton의 후기행태주의가 출발점)
1970	공공선택이론	Ostrom	경제학적 관점으로 정부실패를 연구
1980	신제도론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도적 제약 연구
1980	신공공관리론	Osborne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민영화 중시(기업형 정부)
1990	거버넌스론	Peers, Rhodes	정부·시장·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협치)
1990	신공공서비스론	Denhardt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강조

01 **중요도** ■■■ **난이도** ■■■□ 2005 지방9급 등 총10회

비용편익분석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NPV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 ② IRR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적다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 ③ IRR은 NPV가 0이 되거나, B/C가 1이 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 ④ NPV가 0보다 크거나, B/C가 1 이상이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합의성 댐

IRR은 내부·수익률*이므로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정답·해설 답 ②

내부수익률(IRR)이 **기준할인율(시중금리)보다 커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 사회적 할인율 X, 민간 할인율(시장이자율) O

- ① [O] NPV(Net Present Value), 즉 순현재가치기준이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인정된다.
- ② [X] IRR(Internal Rate of Return), 즉 내부수익률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로서 공공할인율을 모를 때 사용하는 기준이므로 내부수익률이 기준할인율(민간할인율)보다 커야 타당성이 인정된다.
- ③ [O] IRR(Internal Rate of Return), 즉 내부수익률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따라서 B-C를 0으로, 또는 B/C를 1로 만들어주는 때의 할인율이다.
- ④ [O] NPV(순현재가치 = B-C)가 0보다 크거나, B/C(편익비용비율)가 1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평가기준	개념	특징
순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B-C > 0이면 타당성 O (가장 일반적으로 정확한 기준)
비용편익비율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B/C > 1이면 타당성 O (이차적·보완적 기준)
내부수익률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	예상(기대)수익률, 할인율을 모를 때 사용. 내부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다. 복수가 단점
자본회수기간	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짧을수록 좋다(할인율이 높을 때는 단기, 낮을 때는 장기투자가 유리) 재정력 부족시 적합

02 **중요도** ■■■□ **난이도** ■■■ 2012 해경간부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비용과 편익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② 비용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미래에 발생할 비용만 계상한다.
- ③ 비용은 자원의 투입에 따른 진정한 가치,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잠재가격으로 평가한다.
- ④ 보조금은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세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해설 답 ④

사업에 실제 투입된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금**은 단순한 금전적 이동이므로 비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 ① [O] 화폐가치의 등락에 따른 지가상승이나 금전적 이동 등 단순한 금전적 편익은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이 아니므로 제외시킴
- ② [O] 비용은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이미 투입된 회수불능의 매물비용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비용만 계상
- ③ [O] 비용은 시장가격을 직접 활용할 수 없으므로 자원의 투입에 따른 진정한 가치, 즉 완전경쟁적 가격으로 조정된 잠재가격 개념으로 평가

주의 [CBA에서 비용과 편익]

- 금전적(화폐적) 가치로 표시 O
- 금전적(현금적) 편익 포함 X

19

중요도 ■■■ 난이도 ■■■

2011 경찰간부 등 총10회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 중 '협상자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결정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한다.
- ② 집행자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한다.
- ③ 정책집행의 실패 요인으로 집행자의 정책목표 왜곡을 들 수 있다.
- ④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은 주민만족도이다.

합격생 톨

암기법(고지협재관-기행협구추-기협왜책오-효능만대우)을 충동원해서 풀었어요.

정답 · 해설 답 ①

정책결정자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지만 지식과 정보의 부족 및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기 곤란한 모형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 ③ [○] 협상자형에서 정책집행의 실패요인으로는 집행수단상 기술적 결함이나 협상의 실패로 인한 부집행, 집행자의 정책목표 왜곡(적응적 흡수) 등을 들 수 있다.

20

중요도 ■■■ 난이도 ■■■□

2009 국가가급

R.T.Nakamura와 F.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결정기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가는 이러한 목표의 바람직성에 동의한다.
- ② 정책결정가와 정책집행가는 정책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
- ③ 정책결정가가 정책형성에 정통하고 있지 않아 많은 재량권을 정책집행가에게 위임한다.
- ④ 정책집행가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유제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제시한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책집행자의 유형은? 2017 지방7급

- ① 지시적 위임자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 ③ 협상가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정답 · 해설 답 ④ 유제 ②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모든 과정을 집행자가 장악하는 모형이다.

- ① [×] 고전적 기술자형 또는 지시적 위임가형에 해당
- ② [×] 협상자형에 해당하는 설명
- ③ [×]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하는 설명

주의

[집행자의 재량]

- 고전적 기술자형 : 재량권 X
- 지시적 위임가형 : 상당한, 어느정도, 행정적 재량권 O
- 협상가형
- 재량적 실험가형 : 광범위한, 폭넓은 재량권
- 관료적 기업가형 : 가장 광범위한 재량권

☞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

구분	유형	하향적 · 집권적 집행 (top-down)	상향적 · 분권적 집행 (bottom-up)
정책상황		안정적 · 구조적	유동적 · 동태적
정책목표 수정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높음
결정과 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이원론)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일원론)
관리자의 참여		참여 제한, 충실한 집행이 중요시됨	참여 필요
집행자의 재량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집행관료의 재량권 인정
정책평가의 기준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정책성과는 2차적 기준
집행의 성공요건		결정자의 리더십	집행관료의 재량권
핵심적 법률		있음	없음
Berman		정형적(거시적 · 하향적) 집행	적응적(미시적 · 상향적) 집행
Elmore		전향적 집행 (forward mapping)	후향적 집행 (backward mapping)
Nakamura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학자		Van Meter & Van Horn, Sabatier & Mazmanian	Berman, Elmore, Lipsky
방향과 흐름		집권적, 기계적, 단계적 연역적, 규범적	분권적, 역동적, 귀납적, 실증적

☞ 하향 · 상향 · 통합모형과 주요 학자

하향	Pressman & Wildavsky(1973) Van Meter & Van Horn(1975) Bardach(1977) Sabatier & Mazmanian(1979)
상향	Berman(1978) Lipsky(1980) Elmore(1980) Hjern & Hull(1982)
통합	Ripley & Franklin(1982) Elmore(1985) Sabatier(1986) Goggin(1990) Winter(199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정답·해설 답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있다.
 ↳ 국채에는 포함 O, 국가채무에는 포함 X

- ① [O]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O]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발행한다(「국채법」 제5조).
- ④ [O]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는 아직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2020.6.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 미국은 136%, 일본은 233%이다(OECD 국가 평균 110%).

☞ 우리나라 국채의 종류

국고채	세금이 부족할 때 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국채
재정증권	일시적인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년 만기로 발행하는 국채(유가증권)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환율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외평채)

📌 주의 [국채 & 국가채무]

국채와 국가채무는 다르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고, 국가채무는 나라의 빚을 말한다.

[결론]	[국채] ≠ [국가채무]	
국고채	○	○
재정증권	○	X
국고채무부담행위	X	○

예산과 재정운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여 확정한다.
-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설정한 지출 한도에 맞추어 각 중앙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도입하고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답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예산안 제출시 함께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편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일종의 사전예산제도의 성격을 지니며 어디까지나 기획재정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으로 확정되는 행정내부계획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국회가 공식적으로 심의하여 확정되는 계획도 아니며, 「국회법」에도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② [O]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전략적으로 설정한 지출한도에 맞추어 각 중앙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O]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체인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2007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 ④ [O]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O]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2022.11.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국가재정법」 제27조).

01

중요도 □□□ 난이도 ■■□□

2022 국가9급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 ②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 ③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 ④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유제

예산을 성립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2012 지방9급 등 총2회

-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 ②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③ 정부출자기관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
- ④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정답 · 해설

답 ③ 유제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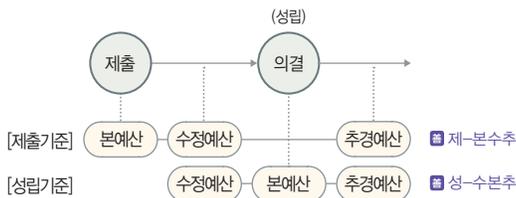
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문의 표현과 수정예산의 경우 본예산이 성립(의결)되기 전에 편성·제출된다는 점을 착안하여야 할 문제이다. 수정예산은 본예산 성립(의결)에 앞서 편성·제출되는 예산을 의미하므로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는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의 순서가 된다.

☞ 본예산 · 수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 준예산

수정예산	국회제출 후 성립(의결) 전에 정부가 수정하여 편성·제출하는 예산
본예산	정부에 의하여 국회에 최초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확정된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성립(확정)된 후에 추가·변경된 예산 ¹⁾
준예산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성립)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집행과 결산은 본예산에 포함되어 운용

☞ 예산의 제출 · 성립시기별 유형



02

중요도 ■■■ 난이도 □□□

2013 경쟁승진 등 총8회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 ③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 출제분석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을 묻는 단순한 빈출문제로 개념 상 차이만 알아두면 된다.



추경예산은 의결(성립) 후에 예산을 변경·추가하는 것입니다.

정답 · 해설

답 ①

추경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되는 예산으로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 ☑ ② [○]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본래 예산 즉, 당초예산을 의미한다.
- ③ [○]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 ④ [○]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정답·해설 답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에 해당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사전적 예산제도**이다.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3조).
- ② [○] 통합재정은 매월 경상수지, 자본수지, 대출순계 등의 흑적자여부를 알려주어 건전재정 유도, 국민경제(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에 기여한다.
- ③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완성이 2년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의 총사업비 팽창을 방지하고자 하는 재정통제수단이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총사업비의 변경 시에도 기재부장관의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미 착수된 대형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소요유발요인을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④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국책사업(총 500억 이상사업으로 국고 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 지방재정통제제도

통제 제도	권력성	사전성	주체
① 예산편성자침시달제	권력적 통제 ¹⁾	사전통제	행정통제
② 지방채발행승인제도			
③ 재정투자자심사제도	비권력적 통제	사후통제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⑤ 지방재정진단제도			

1) 권력적 통제이면서 사전적 통제에 해당하는 ①②는 2007년 폐지되었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비교

	총사업비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개념	완성에 2년 이상 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정하여 기재부장관 과 협의(변경시에도 협의)하게 하는 재정통제제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재부장관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재정통제제도
목적	착수된(시작된) 대형사업 의 총사업비 팽창을 막기 위한 사전적·과정적 통제수단 * 설계변경 등으로 총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시 기재부장관은 타당성 재조사 실시 및 국회에 결과 보고	신규 대규모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한 사전적 통제수단(착수전 사업) * 중앙관사장의 신청 또는 직권, 국회의 요구로 기재부장관이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
도입시기	1994년	1999년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대상사업	국가가 직접 시행 또는 위탁사업, 국가예산·기금의 보조를 받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음 사업 ①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토목 및 지능정보화사업 ②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건축 사업 ③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연구 개발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 중 다음 사업 ① 건설공사 가 포함된 사업 ② 지능정보화사업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기타 보건·복지·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사업 등 [제외대상]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문화재복원, 국방·안보·보안사업, 기존시설의 단순개량·유지보수 등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회계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 ②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 ③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 · 해설 답 ②

②는 **반대이다**. “예산회계”는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예산회계”는 단순히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현금주의 방식으로 기록한 대륙계국가의 전통적인 회계방식이고 “재무회계”는 재정성과를 발생주의방식으로 기록한 영미계의 현대적인 회계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대륙계회계의 영향을 받아 예산회계방식만 사용하였으나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무제표는 모두 재무회계(발생주의·복식부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세출결산서 등은 여전히 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예산의 궁극 목적인 재정에 대한 통제와 책임 확보 그리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현금주의로 운용되는 예산회계와 발생주의로 운용되는 재무회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기 때문이다.

- ☑ ① [○] 국가회계는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회계는 행정안전부가 2005년 구축한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 ③ [○]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만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 ④ [○] 정부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의 사실에 따라 차변과 대변 양쪽을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비교

구분	예산회계	재무회계
의의	예산의 집행실적	재정성과 및 재정상태 보고
전통	대륙계국가의 전통적 회계	영미계국가의 현대적 회계
결산 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 국가채무계산서 등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인식 기준	모든 거래를 현금의 유입·유출시점에서 수입과 지출로 인식	현금의 유입·유출에 관계없이 현금 유입·유출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로 인식
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 얼마를 지출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목적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
보고	회계단위별 분리 보고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가치 지향	행정내부조직 중심 (예산집행 통제, 법규준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
자기 검증	없음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회계오류의 자동 검증

☞ 우리나라 재정관리시스템

국가	D-BRAIN (D-BAIS)	2007년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국가통합재정관리시스템
지방	e-호조	2005년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주의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으로 선거연령(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회의원)과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조례개폐청구 연령은 19에서 18세로 하향조정되었으나 주민소환투표 등의 청구연령은 여전히 19세이다.

선거연령과 투표·청구 연령(2022.7.1. 현재)

	대상	종전	개정	근거법률
선거연령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19세 이상	18세 이상	→ 2020.1.1. 시행 「공직선거법」
투표·청구 연령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조례청구	19세 이상	18세 이상	→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¹⁾ → 2022.1.13. 시행
	주민투표 ²⁾	19세 이상	18세 이상	「주민투표법」
	주민소환 ³⁾	19세 이상	19세 이상	→ 2022.4.26. 시행

- 1) 「주민조례발안법」 제정(2022.1.13. 시행)으로 청구연령, 청구대상, 서명인원, 처리절차 등이 개편되었다.
- 2) 「주민투표법」 개정(2022.4.26. 시행)으로 주민투표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3) 주민소환투표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현재(2022.6.) 국회 계류중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 개편(2022.1.13. 시행)

	종전	개편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청구요건	① 광역단체 및 50만 이상 대도시 : 1/100~1/70 ②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1/50 이상 1/20 이하	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단체 : 1/200 ② 100만~800만 광역단체 : 1/150 ③ 50만~100만 기초단체 : 1/100 ④ 10만~50만 기초단체 : 1/70 ⑤ 5만~10만 기초단체 : 1/50 ⑥ 5만미만 기초단체 : 1/20
처리시한	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의회는 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 개편(2022.4.26. 시행)

	종전	개편
투표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청구요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모두 ¹⁾
청구방법	서면서명	서면서명 + 전자서명 ²⁾
투표일	발의일부터 23~30일 이내에서 단 체장이 관할 선관위와 협의·결정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투표방식	현장투표	현장투표 + 전자투표 ³⁾
확정요건	1/3 이상 투표, 과반 찬성	1/4 이상 투표, 과반 찬성
개표요건	1/3 이상 미투표시 개표 없음(부결)	1/4 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 실시

- 1) 3) 2022.10.27. 시행
- 2) 2023.4.27. 시행

2023 김종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①

K.J.G

HOT LINE

온라인강의 www.kaspa.co.kr / TEL. 02-532-5280~1
gong.con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 TEL. 02-812-6521

펴낸날 2023년 2022년 7월 11일

펴낸이 김종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전화 TEL. 02-532-5314 FAX. 02-532-5315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GVU CHARACTER
POWERED BY ST UNITAS

ISBN 979-11-92405-11-7
ISBN 979-11-92405-10-0(세트)
값 42,000원(전 3권)



14350